

行政學에서의 情報技術導入¹⁾

기 영 석(목원대학교 행정정보학과)

I. 서 론

오늘날은 산업사회를 지나 정보사회로 이행하고 있으며, 목전에 두고 있는 21세기는 보다 성숙된 정보사회로 나타날 것이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인류 역사상 사회적 변화가 가장 빠르고 폭넓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갈 사회를 정보사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사회에 대한 개념정의는 학자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으나, 공통적인 내용의 하나는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지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정보사회를 가장 특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용어의 하나가 정보통신혁명이라 할 수 있다. 정보통신혁명은 컴퓨터로 대표되는 정보기술과 전화로 대표되는 통신기술이 디지털(Digital) 기술을 매개로 결합하여 연출해 내는 사회의 변화상이 가히 혁명적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 것이다.

특히 불과 4-5년간에 걸친 인터넷 돌풍은 이제 인터넷 혁명이라고 불리어질 정도로 인터넷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또한 혁명적이라 할 수 있다. 인터넷이 처음에는 단순히 제한된 범위의 사람들간에 학술정보를 공유하고 빠른 속도로 전자메일을 교환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 정도로 생각되었다. 그후에는 인터넷 신문, 인터넷 방송 등으로 전세계의 소식을 실시간(real-time)으로 모든 지역에 전달해 주더니, 이제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에 까지 영역 확장을 해나가고 있다.

인터넷의 발달이 교육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교육의 내용이 바뀌고, 교육의 방법이 바뀌고 있다. 한마디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교육이 서 있는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百年之大計)라 했다. 즉 교육은 100년 앞을 내다보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 현재의 교육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버릴 수 없다. 100년 앞은 고사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변화를 충분히 수용하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물론 인적·물적 재원의 부족이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는 사실을 모르는 바 아니다. 적어도 새로운 사회적 변화에 적응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교육 내용, 새로운 교육 방법을 모색하려는 노력이 현재보다는 훨씬 더 많아야 할 것이다.

정보사회의 진전과 함께 행정학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떤 과목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한 대답은 행정정보화 교육과 행정교육의 정보화라고 할 수 있다. 전자인 행정정보화 교육이 행정학의 교과과정 내용에 해당한다면 후자인 행정교육의 정보화는 교육의 방식에 해당할 것이다. 기존의 과목을 다른 명칭으로 바꿀 수 없는 경우라면, 이들 과목의 교육 방법 면에서 정보통신기술 또는 인터넷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향으로 교육

1) 본 논문은 아직 완결되지 않은 것으로서 많은 조언과 비판을 해주시면 논문 완성시 반영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시도하고 있는 '행정정보학과'로의 실험 역시 이제 막 시작한 것으로서 적지 않은 과제와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방법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II. 대학의 위기와 개혁의 필요성

1. 대학의 환경변화

오늘날 우리 대학이 처하고 있는 환경변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의 대학은 간판만 달면 학생이 몰려오는 철저한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었으나 이제는 수요자중심의 대학교육시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97년 대입에서 벌써 187개 대학에서 9,000명의 정원이 미달하였고(그중 20개대는 10~60% 미달(주간 「이코노미스트」(98. 4. 28)), 2003년경이면 대입정원이 72만6천명, 고졸 예정자가 64만5천명으로 예상되고 있어 교육시장의 선택주도권이 공급자로부터 수요자인 학생과 학부모에게로 이동하게 된다.

둘째, 컴퓨터로 대변되는 정보기술과 전화로 대변되는 통신기술이 결합하여 나타난 정보통신혁명이 모든 분야에서 커다란 변화를 야기 시키고 있다. 특히 불과 수년 전부터 대중화하기 시작한 Internet 열풍은 많은 분야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대학교육도 예외일 수는 없다. Cyber School 또는 Cyber Class로 불리는 가상대학은 인터넷이 가능한 곳이면 어디서나, 언제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교육행정 분야에 있어서도 인터넷의 웹 베이스(web base)의 인트라넷(Intranet)의 구축으로 이미 기술적으로는 전자결재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한 상태에 와있다.

셋째, 1980년대이래 세계화의 국제질서 속에서 세계 각국은 “개방과 무한경쟁”을 기치로 내세우면서 자국의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많은 분야에서 과감한 개혁을 진행시켜 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은 경쟁력의 확보인데, 이를 위해서는 경쟁과 협력을 통한 경쟁력의 제고가 중요한 사안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 나라에서는 지나치게 경쟁을 강조한 나머지 특히 교육분야에서 중시되어야 할 협력은 설자리를 잃고 있는 것이다.

넷째, 우리 나라는 지난 1991년 지방의회의원선거를 시작으로 30여 년만에 지방자치가 부활됨에 따라 세계화와 함께 지방화로의 두 경향이 동시에 진행되어 왔다. 이로 말미암아 지방대학은 지역으로의 관심에 보다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 특히 대전은 제3 정부종합청사로 11개의 중앙정부기관이 이전함에 따라 새로운 수요를 많이 창출할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최근 들어 교육부의 대학정책이 획기적인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 같다. 즉, 대학이 일정 기준을 충족시킬 경우, 대학의 학과별 정원을 대학의 자율에 맡기는 정책을 발표했다. 또한 서울소재 대학에 대해 그 동안 수도권 인구억제를 이유로 정원증가를 억제해 오다가, 이번에 많은 대학에 대해 모집정원을 증원시켜 주었다. 또한 교육부는 대학의 기구축소, 유사학과 통폐합, 학부제실시 등의 구조조정정책을 각 대학에 권고하고 있다.

2. 대학의 위기

기술전쟁의 시대로 비유되는 오늘날 과학기술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무기에 해당한다. 꼭 필요한 최소한의 과학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는 나라는 기술식민지 국가의 위치에 서게되어 자국

의 주권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된다. 이는 기술주권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학기술 자립도가 0.03으로 미국의 1/100, 일본의 1/16에 불과하다. 현재 우리나라가 처해있는 IMF 국난의 원천적 책임을 우리 대학도 면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한 사회의 엄한 문책은 앞으로 대학의 존립과 사회적 위상을 근본적으로 뒤흔들어 놓게 될 것이다.

수요자 중심의 대학교육상황은 99년부터 허용되는 외국대학의 국내진입의 허용, 그리고 최근에 새로 도입된 학점은행제와 대학설치의 자유화 등과 겹쳐 교육시장에서의 대학의 지위는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는 생존하기조차 힘들게 되었다. 이러한 구조적 난국에다 앞으로 상당 기간 계속될 「IMF 위기」로 인한 국민경제의 위축은 대학경영에 대해 실로 커다란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IMF 위기가 대학에 미치는 즉각적인 충격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학진학의 매력이 급격히 줄고 있고, 등록금이 동결되고 휴학생이 늘고 있다. 국립대학과 서울 및 대도시의 사립대학으로의 편입 추세는 많은 지방대학의 재정수입 구조의 근본을 흔들고 있다. 특히 대학시설을 확충하거나 캠퍼스 이전계획을 추진하면서 외부차입에 의존한 대학들은(141개 4년제 대학당 평균 175억 원의 빚) 높은 이자부담과 부채상환 압력 때문에 단국대처럼 부도사태까지 몰려가게 되었다. 게다가 백화점식 영세학과 운영체제에다, 우리 나라 안의 어느 부문보다도 낙후된 경영관리 체제를 갖고 있는 대학경영의 방만하고 낭비적인 비효율적 구조가 겹쳐있다. 그래서 오늘의 우리 나라 대학들은 공·사립을 막론하고 보다 근본적이고도 과감한 구조개혁이 없으면 그 기능에 대한 사회적 수용도, 조직으로서의 생존도 불가능해 지면서, 대학제도 전체가 파국과 붕괴를 맞을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3. 선진국 공공부문 구조조정 전략으로부터의 교훈

80년대이래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선진국들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들 체제의 여러 부문 특히 공공부문에 대해서 구조개혁의 노력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이러한 정부개혁은 영국부터 시작되어 뉴질랜드, 캐나다 그리고 미국의 공공부문을 휩쓸고 있다.

그 핵심방향은 지금까지의 관료형 정부로서는 시민의 만족도, 국민경제의 경쟁력도 제고할 수 없기 때문에, 「기업형 정부」(entrepreneurial government)로 그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한다는 것이었다. 정부의 「재구조화」(restructuring) 또는 「리엔지니어링」(reengineering)이라고 개념화된 이러한 구조조정 사업은, 조직의 이념부터 바꾸고 사업을 재구성하며, 조직의 구조와 업무처리의 과정 등 체제의 전 국면을 근본적이고도 과감하게 바꾸어, 고객만족을 획기적으로 제고시켜 시장경쟁력을 갖도록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내는 것(reinventing)이다.

이러한 정부의 구조개혁 사업은 ①불필요한 기능이나 프로그램을 폐지·축소하는 등의 사업 영역의 재정의, ②이에 따른 조직의 재구성, ③인사·예산·정보처리절차를 보다 능률화시키기 위한 모든 업무 「프로세스」의 재설계, 그리고 ④고객의 수요와 경쟁체제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조직 Network의 재구조화를 포함하게 된다(M. Hammer(안중호 역)1993).

80년대 후반까지의 미국의 공교육제도도 그 침체와 낙후성이 심각해서, 그 나라 교사연맹의 회장까지도 미국 공립학교들의 구조가 “아무 것도 하지 않아도 아무손해가 없는, 미국사회에 있으면서도 공산주의 사회의 기업을 더 닮았다”고 비판할 정도였다(Osborne and Gaeber(1992):318~319). 이 상황을 고쳐보고자 1989년 미국 대통령과 주지사들이 모인 교

육개혁 정상회의(Education Summit)에서 미국 공교육제도 개혁과제로서 다음의 다섯 가지가 강조되었다(ibid: 314~4).

- ① 학부모와 학생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
- ② 규칙과 절차보다 결과에 초점을 두는 책임 있는 교육관리제도
- ③ 권한과 결정의 책임을 각 학교로 분산
- ④ 학생들을 잘 지도했을 때는 정당한 포상을 하고, 그렇지 못할 때는 책임을 묻는 인사제도
- ⑤ 학부모와 지역 민간기업의 활발하고도 지속적인 참여 통로의 보장

이 모든 구조개혁 노력에는 3대 핵심요소, 즉 고객(customer), 경쟁(competition) 및 변화(change)라는 3C가 그 핵심에 자리잡고 있다.

Ⅲ. 행정학 교육과정 현황

지금까지 행정학은 국가발전논리, 정치민주화, 산업민주화, 도시화, 복지, 환경 등 시대적 과제와 관련된 주제들이 연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최근에는 새로운 사회변화요인, 이를테면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 무한경쟁화 등이 행정체제 내외에 보다 많은 변화를 요하고 있으며, 행정학연구의 주제로서 새로운 인식과 연구기반을 추구하고 있다.(이기주, 1996)

대학행정학의 교육은 미래의 행정가를 양성하고 행정현상에 대해 미래의 조망을 하는 것이다. 여기서 행정연구는 대학행정학교육을 통해 미래사회변화에 대한 행정재설계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전종섭, 1987). 행정학의 연구는 제도적으로 대학기관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한국행정의 현실개선을 위한 이론의 참여도 대학행정학을 모체로 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향후 급변하는 사회에서 국가의 생존·발전은 인적자원의 확보, 특히 전문지식을 지닌 인적자원의 확보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유념할 때, 대학행정학 교육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된다.

1. 교양과목의 현황

행정학과에 개설되어 있는 현행 교양과목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영어와 기타 외국어의 비중이 매우 높다. 특히 영어의 비중이 높은 것은 우리 나라가 처해있는 정치적, 행정적, 경제적 및 사회적 여건으로 인해 외국과의 긴밀한 교류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둘째, 교양과목에서 행정학 인접학문의 개론이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현대 행정학 태동되고 발전되는 과정에 여러 인접 학문의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고, 학문의 추세도 학제적 접근 방법(interdisciplinary approach)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컴퓨터 관련 과목의 빈도가 높다. 이는 최근의 경향으로서 사회가 정보화시대로 향하기 때문에 기초 컴퓨터 과목의 필요성이 반영된 것이다.

다음은 교양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과목 중 빈도수가 가장 큰 상위 6개 과목에 대한 현황이다.

<표> 행정학과 교양과정 현황

과목명 \ 구분	필수	선택	합계
영 어	14	7	21
정치학개론	4	6	10
경제원론	4	5	9
제2외국어	4	4	8
컴퓨터입문	2	5	7
사회학개론	1	6	7

2. 전공과목의 현황

우리 나라 행정학과의 교과과정은 모든 대학에서 거의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대학교수와 같은 행정학자를 양성하기에 적합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극히 소수의 대학을 제외하고는 학생들의 진로도 고려해서 교과과정의 내용도 바뀌어야 할 것이다. 또한, 사용되고 있는 교재도 서울의 일류대학에서 사용하는 것이 지방의 전문대학에서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것 역시 교재의 내용에 난이도를 고려해서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행정학과 개설 전공과목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이기주, 1996).²⁾

첫째, 전통적으로 행정학의 핵심과목으로 분류되어 온 조직, 인사, 재무행정 과목이 모든 대상학교에 개설되어 있다.

둘째, 많은 학교에서 방법론 관련 분야를 개설하고 있다. 행정통계/계량분석이나 조사방법론은 각각 23개 학교에서 개설되어 있으며, 연구방법론도 11개교에서 강의되고 있다. 행정학과에서 방법론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질적 접근방법보다는 계량분석에 더욱 치우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행정정보체계를 개설하고 있다. 이는 정보화시대에 맞추어 바람직한 현상이라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분야와 관련된 교재의 일부분은 외국의 이론을 소개하는 수준이다.

대상학교에서 개설된 과목 중에서 빈도가 10 미만인 과목을 필수와 선택으로 나누어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2) 전공필수 (이후() 안은 빈도): 정치학개론, 정책형성론(4); 국가론(2); 경제원론, 미시경제학, 정책평가, 법학개론, 사회학개론, 행정/정책과정론, 정책분석·평가론(1).

전공선택: 행정학특강, 지방재정, 정책분석(9); 행정통계(8); 국제행정, 정책분석·평가, 정부/공공관계, 정책평가(6); 정부와 기업, 관리과학, 행정전산, 사회심리학, 규제행정(5); 한국행정사, 노동행정, 정치사상, 공공경제(4); 거시경제학, 과학기술정책, 정책형성, 정책학세미나, 행정학세미나, 북한행정, 정책학 연습, 사무관리, 정책집행, 행정윤리(3); 미시경제학, 정치경제론, 공공선택론, 정책결정세미나, 조직관리세미나, 재무관리, 체육, 사회정책, 자원배분론, 인력정책, 법학개론, 국가론 정책/행정과정, 정치과정, 현대 정치이론(2); 국가론, 엘리트론, 개별국 행정, 비교산업정책, 정보사회와 행정, 통상정책, 관리분석세미나, 발전행정세미나, 재무행정세미나, 교통행정,公安행정, 인간관계, 행정PIR, 행정개혁, 비교정책, 산업사회행정, 선진국 행정, 조직론 연습, 정치와 행정, 행정환경, 국제정치, 관리경제, 토지정책, 사회법, 현대사회론, 행정실무, 비교정치, 지방의회, 의회행정, 세무행정, 한국정치행정, 자원정책, 정책집행·평가, 비교발전행정, 인구 및 도시화론(1).

<표> 행정학과 전공과목 현황

과목명	구분	필수	선택	합계
조직론		22	4	26
인사행정		22	4	26
재무행정		21	5	26
지방행정		11	15	26
복지행정		1	25	26
도시행정		6	19	25
행정법		3	21	24
조사방법		15	8	23
정보체계		4	19	23
행정통계(계량분석)		9	14	23
(행정)기획		6	15	21
비교행정		5	15	20
관료제		2	18	20
헌법		1	18	19
발전행정		4	15	19
행정철학		0	19	19
공기업		0	19	19
원서강독		5	14	19
행정학개론		15	3	18
행정(조직)행태		0	18	18
정책학		13	4	17
한국행정		4	13	17
행정학연습		1	16	17
민법총칙		0	17	17
행정이론		2	14	16
행정(정책)사례연구		0	15	15
한국정부론		0	14	14
행정관리		2	11	13
지역개발		0	13	13
정부예산(회계)		0	12	12
연구방법론		4	7	11
환경행정		0	11	11
재정학		0	10	10

3. 현행 행정학 프로그램의 교육방법

학생교육은 교수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을 전달하는 방법도 교육효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표>에 의하면 응답자의 84.1%가 이론위주로 강의를 하고 있으며, 8.5%만이 실체를 더욱 강조하는 강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강의를 이론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행정학이 응용과학이기 때문에 실체를 무시할 수 없다. 실체를 도외시한 행정학과목은 교과목과 현실간의 괴리현상을 심화시킴으로써 행정학의 존재가치를 저하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여건이나 교육기자재의 불충분, 교육의 편의성 등 여러 요인으로 인하여 현재의 행정학 교육은 이론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

<표> 강의방법 (이론중심/실제중심)

	빈도(명)	비율(%)
이론 중심	69	84.1
실제 중심	7	8.5
병합	6	7.3
합	82	100.0

교육방법에서 실제 중심이라고 답한 경우에도 컴퓨터나 폭발적인 대중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인터넷을 행정학 교육에 활용하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생각된다.

IV. 교과과정의 개편

1. 교과과정 개편의 곤란성 : 정치적 성격과 혁신적 성격

대학개혁의 궁극의 목표는 교육의 질 향상에 있다. 그러나 지금의 우리 나라 대학교육의 질 통제는 아무도 관심이 없다. 교수도 학생도 편한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되고 그 결과가 평가된다. 따라서 교육과정의 설계·수업의 전개, 교육결과의 평가관리에 걸쳐 획기적인 질 통제 방식이 도입되어야 하며, 모든 대학개혁은 그것이 교육의 질 관리 향상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궁극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교과과정의 개편은 그 과정의 정치적 성격과 혁신적 성격으로 인해 획기적인 개편은 매우 어렵다.

대학은 논리와 이성에 의해 움직여지는 지고의 상아탑이라고 일반적으로 인식되어 왔으나, 실제로 대학개혁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현상들은 오히려 대학이 어느 곳보다도 정치적 행태를 명확히 볼 수 있는 장이라 한다. 이러한 현상은 대학개혁 가운데서도 교과과정의 개편을 둘러싸고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다.

우리 나라에서는 “한번 교수는 영원한 교수”라는 표현이 오랫동안 대학 사회를 지배해 왔다. 오랫동안 대학교수의 신분이 확실하게 보장되어 왔으며, 미국과는 달리 최근까지도 대학간의 교수이동이 그다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 요구에 부응한답시고 특정 교수의 담당 과목을 없애는 일은 엄청난 반대에 부딪치게 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한편, 새로운 교육의 아이디어가 광범위하게 채택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렇다면 왜 교육의 아이디어 확산이 농업혁신이나 의료 분야의 혁신보다 확산이 느린 것인가? 몇 가지 이유 중의 하나는 새로운 교육 아이디어를 권장하는 변화주도자가 부족하다는 데 있다(Rogers & Schoemaker, 1971). 변화의 주도자는 교육을 현장에서 담당하는 교사들인데, 이들은 그들이 대학 재학시절 교수들이 사용하던 것을 보고 배웠다. 그 때문에 변화의 속도가 매우 빠른 사회에서는 새로이 필요성이 대두되는 교과목이나 교육방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능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현대수학은 미국에서 광범위하게 채택하기까지 단 5년이 소요된 반면, 유치원의 경우는 무려 50여 년이 소요되었다(Mort: 1953, Allen, 1954: Carlson: 1965)고 한다.

2. 교수 주도의 교과과정 개편

<표 3>은 현재의 행정학 교육프로그램이 누구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응답결과이다. 응답자의 54.9%가 '교수중심'으로 교과목이 결정되고 있다는 반응을 보인 반면에 '학생'과 '사회수요'를 고려하여 교과목이 결정된다는 응답자는 각각 23.2%와 8.5%이었다. 학생과 사회수요를 동시에 고려한다는 반응도 1.2%에 불과하다. 또한, 교육부와 학교당국과 같은 제도적인 기관을 중심으로 행정학 교육프로그램이 형성되고 있다는 응답자도 4.9%에 해당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교수들이 행정학 분야의 전문지식을 기초로 후학인 학생들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있으며 또한 미미하나마 제도적 기관의 영향력을 인지하는 반응을 보임으로써 공급자 중심의 행정학 교육을 하여왔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교육의 또 다른 주체인 학생들의 의사 혹은 요구와 사회수요의 변화가 행정학교육프로그램의 구체화과정에 크게 반영되지 않음으로써 고객 중심적 교육과 사회봉사를 위한 교육이 소원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표 3> 행정학 교육프로그램 결정을 위한 요인

	빈도 (명)	비율 (%)
학생중심	19	23.2
교수 중심	45	54.9
교육부 중심	1	1.2
사회수요 중심	7	8.5
학교당국 중심	3	3.7
기 타*	7	8.5
합	82	100.0

* 학생과 교수중심/학생과 사회수요중심이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경우임. 교수와 사회수요중심이 포함됨

이러한 교과과정의 개편 주기도 '매년 개편한다'는 응답자는 전혀 없으며, '2년에서 3년 주기로 교과목을 개편한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45.1%이었다. 교과목 개편주기가 4년 이상이라는 응답도 53.4%를 차지하였다.

<표 5> 교과목 개편 주기

	빈도 (명)	비율 (%)
매년	0	0.0
2-3년	37	45.1
4년 이상	45	54.9
합	82	100.0

교과목의 개편의 이유에 대한 응답결과는 <표 6>에 있다. 이에 의하면 응답자의 64.6%가 학문추세를 반영하기 위해서 교과목을 개편한다고 답하였으며, 25.6%는 학사관리상 교과목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한편, 학생들의 요구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서 교과목을 개편한다는 반응은 3.7%에 불과하였다. 교과목 결정과 전공필수/선택의 구별 기준과 마찬가지로 교과목 개편도 학생들의 요구에 대한 반응이라기 보다는 교수들의 의사와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6> 교과목 개편의 이유

	빈도 (명)	비율 (%)
학생들의 의사반영	3	3.7
학사관리의 필요	21	25.6
학문추세를 반영	53	64.6
학과 임의상	2	2.4
기 타*	3	3.6
합	82	100.0

* 위의 4가지 요인이 혼합되어 있음

IV. 개혁의 사례 : 행정정보학과로의 변신

1. 개혁의 필요성 인식

교육시장 개방정책을 비롯한 일련의 교육정책에 의거, 교육환경은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으며, 지방대학은 큰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었다. 특히, IMF 체제하에서 사회의 어느 부문도 직장의 안정성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으며, 이에 대학도 시장개방에 따른 경쟁력강화의 요구와 함께 일대 개혁을 강요당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이제는 변하지 않으면 대학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생각이 만연하게 되었다.

기존 행정학과의 교과과정은 전술한 바와 같이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으며, 그나마도 교과과정에 대한 획기적인 개편은 지난 수년 동안은 없었다. 그런데 우리 대학과 같은 지방대학의 경우, 졸업생 중 대학교수나 전문 연구가로 진출하는 사람의 수는 극히 제한적이었던 것이 사실이었다. 따라서 다른 대부분의 졸업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교육과정 및 교육방법을 개혁해 나가야 할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러한 위기의식은 지난 1992년 당시 대학의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5인의 위원 중 한 사람으로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대학의 위기에 대해 절실히 느낄 수 있었다. 당시 대학 장기발전계획 수립에서도 학생위주의 고객지향적인 대학 운영을 중요한 목표의 하나로 설정한 바 있었다.

2. 개혁안의 내용

학생위주의 교육에 대한 필요성은 정보화사회로의 이행과 함께 실제로 졸업생들이 기업으로의 진출이 많음에 부응해서, 사회 및 회사에서 요구하는 컴퓨터에 대한 교육을 행정학과의 교과과정에 편입시켰다. 그후 행정학에서의 컴퓨터 및 인터넷의 활용과 정보관리 관련 강좌 증설하였으며, 이전과 비슷한 과목에 대해서도 컴퓨터 및 인터넷을 활용한 교육방법의 개선을 진행시켰다.

초기의 컴퓨터 교육은 워드프로세서인 「훈글」 교육으로부터 시작하였다. 1991년 당시 행정학과에서 실시한 컴퓨터 강의는 정규 강좌가 아닌 편법으로 시작되었다. 발전행정론 3시간 중 2시간을 당시 인근 학과의 조교에게 부탁하여 「훈글」 강의를 해 주도록 부탁했다. 본인은 학생들과 함께 배우면서 그 다음 학기부터는 배운 것을 토대로 강좌를 개설하고

강의를 직접 담당하였다.

그밖의 Lotus 1-2-3, dBase III+, PC 통신, Internet, Power Point 등은 학내 인근 학과의 교수로부터 방학중 1주(4일)간 실시한 Workshop에서 배운 실력으로 다음학기 강의에 활용하곤 했다.

1993년부터 컴퓨터 통신을, 1996년부터는 학과 전용 LAN을 구축함으로써 인터넷 강의를 시작했으며, 현재는 행정관리 분야에서의 사무자동화에 필요한 기본적인 S/W는 모두 강의되고 있으며, 인터넷을 활용한 Cyber Class도 시험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1999학년도 1학기부터 학과의 명칭을 종래의 행정학과에서 행정정보학과로 바꾸고, 교과과정도 명칭에 걸맞게 정보관리와 관련된 과목을 1/3 정도로 하는 등 대폭적인 교과과정 개편도 함께 실시했었다.

3. 개혁 과정 및 전략

대학에서는 인문·사회과학 쪽으로 별다른 지원을 해주지 않았으며, 향후에도 대학 본부로부터의 재정적 지원의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이에 학과 전용의 LAN 구축에 필요한 재원은 모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실습비 명목으로 추가 부담한 재원으로 마련되었다.

학과의 특성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도로서 학과의 명칭을 기존의 행정학과에서 행정정보학과로 변경하고, 이를 계기로 대폭적인 교과과정의 개편을 단행했다. 이 과정에서 학과 내 선임교수의 충분한 이해와 양보가 큰 힘이 되었다. 이러한 이해와 양보에 대해, 교과과정 개편시 기존의 선임교수에 대한 배려도 빠지지 않았다. 비록 행정정보학과로 명칭변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년을 4년 가량 남기고 있는 선임교수의 담당과목에 대해서는 교과과정 개편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4년 뒤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개편이 가능하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았던 것이다.

혁신의 성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 학과의 경우, 근무지의 변동으로 인해 2명의 교수 총원 여지가 생기게 되었다. 새로이 특성화 할 분야의 교수들을 계속 충원하게 되면 학과의 특성화는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처럼 교과과정 개편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저항이 없었던 것은, 야간 학과와 대학원의 신설로 말미암아 강좌수가 대폭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교수 개인의 담당 과목은 줄이면서도 강의 시간수는 줄어들지 않게 되었기 때문이다.

4. 효과 및 학생들의 반응

초기 인터넷 수업을 진행할 당시에는 한글검색엔진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국의 검색엔진을 사용함으로써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한글로 된 자료도 데이터베이스화 된 것이 많지도 않았기 때문에 한참 동안 인터넷을 통한 자료검색이 별다른 효용을 발휘하지 못했다. 영어가 취약한 학생들로서는 인터넷이 영어를 모르면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어 좀처럼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가 없었다.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서 미국 백악관, NASA 등 외국의 유명 웹사이트에 접속하곤 했다.

주제를 설정해서 각 주제별 정보수집을 웹사이트에서 검색해서 접속하여 제공되는 정보를 다운로드 받았다. 비록 한글검색엔진의 개발과 데이터베이스가 빈약했으나 한글정보의 검색

및 획득방법은 머지않아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되어 이를 권장하였다. 이는 외국어로의 검색과 방법 면에서는 동일할 뿐 아니라 언젠가는 외국어자동번역 S/W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던 것이다.

이러한 인터넷 수업의 효과로 달라진 학생들의 행태로는, 자료수집을 위해 도서관을 먼저 찾았던 학생들이 인터넷상에서의 자료검색을 제일 먼저 하곤 했다. 또한 침체된 학생들의 면학분위기 제고에도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었다. 어떤 학생은 서울에 진학한 친구와의 대화에서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다며 상당한 자부심을 느끼기도 하였다.